

기능연속성계획 프레임워크 개선 방안 연구 - HLS 기반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inuity of Operation Planning Framework - Focusing on High Level Structure -

이영준* · 김재학** · 이미선*** · 정종수****

Lee, Young-Jun · Kim, Jae-Hak · Lee, Mi-Sun · Cheung Chong-Soo

요약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기능연속성계획,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프레임워크, HLS

1. 서론

2017년 1월 17일 재난 상황에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5항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경과했음에도 중앙부처 48개, 지자체 245개, 공공기관 89개 기관 등 총 382개 기관이 미수립 상태였다.

2022년 1월 4일 국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미포함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대상으로 확대 개정하여 2022년 4월 5일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간기관 및 단체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문서의 문제점 도출과 문서의 실행력 향상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에 목적이 있다.

2. 본론

2022년 1월 4일 국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미포함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대상으로 확대 개정하여 2022년 4월 5일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간기관 및 단체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1.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2020년의 중앙부처 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안),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안), 공공기관 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안)의 3가지 프레임워크와 ISO의 HLS MSS 기반 비교분석과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여

* 준회원 · 송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junny_307@naver.com

** 준회원 · 송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david153w@gmail.com

*** 준회원 · 송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leems8609@gmail.com

**** 정회원 · 송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isobcm@gmail.com

프레임워크를 도출한다.

3. 결론

HLS 기반 기능연속성계획(COOP)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하여 기능연속성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업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2020) 중앙부처 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안).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안).
- 행정안전부 (2020) 공공기관 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684호.
- ISO 22301:2019.